

2020. 07

2020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금산면)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처 분 요 구 목 록

□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천 원,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8	-	4,388	7	4	2	1	7	-	-	-	4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천 원)

연 번	건 명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계	18건		4,388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3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공용차량 이용)	시정 (회수)	70		
4	이장 활동보상금 집행 부적정	주의			
5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시정 (소화)	170		
6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주의			
7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319		
8	사업예산 잔액 집행 부적정	주의			
9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935		
10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2,565		
11	비밀문서 관리 소홀	주의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리 소홀	통보			
13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통보			
14	쌀/밭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69		
15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회수)	260		
17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관리 소홀	통보			
18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소홀	통보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타수용비(법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으로 사용하며,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등으로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이라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이라 되어있으며,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서는 세출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소모품 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적정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② 케이블방송 수신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사무관리비가 적정함에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 ③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성격의 현수막 제작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
- ④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품의(내부결재)를 거쳐야 하나 품의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예산을 집행
- ⑤ 2018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
- ⑥ 케이블방송 요금을 납부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체료를 추가로 부당하게 지출

위와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이며,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집행 요구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3호 서식‘구입(물품 · 기타)지출결의서’에는 ‘승낙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¹⁾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 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 서식 대신에 제50호 서식²⁾을 사용하며, 상기 규정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 · 청구인 날인은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별지 제53호서식: 구입(물품 · 기타) 지출결의서, 별지 제54호서식: (공사 ·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2) 별지 제50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

따라서 금산면에서는 물품 구매·공사·용역 등의 금액을 지출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 후에 지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 ① 신용카드(200만원 초과) 및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 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승낙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② 물품을 제작하면서 승낙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을 받아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위와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공용차량 이용)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70,000원
내 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공용차량을 이용한 때 1만원을 감액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총7건, 7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과지급 된 여비 7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이장 활동보상금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명된 통장·이장·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을 규정하고 있다.

「김제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2018.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장회의 참석 수당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170,000원
내 용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총170,000원을 미소화 하였으며, 총275,000원을 과소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공채 170,000원을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콘크리트포장공사함에 있어 다짐도 향상을 위한 필수 공정인 살수차(5,500L) 살수 공정을 감독함에 있어 출장 결과보고서(공정확인) 및 준공 도서에 증빙자료(살수차 임대) 없이 준공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7]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319,000원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구)건설기술관리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제1항 제1호에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관리비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에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하고 확인된 비용만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시 이를 정산(현장 확인가능한 사진 미첨부, 사용자재 반복사용)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319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과다 지급액 319,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사업예산 잔액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제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19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신규 사업예산 반영(부기변경) 등 행정절차(승인 등)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9]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935,000원
내 용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법인균등분 주민세대장 정비 소홀로 인하여, 김제시 금산면 주식회사 ○○○ 등 4개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850,000원, 지방교육세 85,000원 합계 935,000원 과세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935,00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10]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2,565,240원
내 용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 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재산분 주민세대장 정비소홀로 인하여, 김제시 금산면 주식회사 ◇◇◇ 등 7개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2,565,240원 과세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2,565,24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1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비밀문서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상 모든 비밀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5조(보관책임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하고,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고, 단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가.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 나.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다.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그럼에도 금산면은

- ① 비밀보유현황조서 미작성
- ② Ⅲ급, 대외비 접수 후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인, 수령일자 미작성

위와 같이 비밀문서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장 작성 내용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위임자는 위임을 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성명을 쓰는 것)을 하여야 하고, 위임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 및 동의서에서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2018년 6월~2020년 0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 ①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을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재사용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 ② 위임장에 위임사유를 누락하거나 위임날짜 등을 누락하여 위임장에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지 않고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장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는 기간 기산점 및 만료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가. 제155조(본장의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산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라.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에 따라 구 증명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신증명청에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할 경우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송 요청을 받은 날 포함)에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기간을 산정할 시 이송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되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128명의 전출자에 대해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처리하지 않고 최장 7일간을 지연 이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4]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68,740원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의 실경작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김제시 금산면 ***번지의 2필지(577㎡)가 일부 또는 전부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진입로 및 농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총3필지에 대해 68,7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불금 68,740원은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지법 제10조, 제49조제2항 및 제54조와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부재지주 소유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전수조사 등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농지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후 김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감사기간 중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부재지주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수령내역과 대사한 결과 총56건 106,790.13㎡에 대하여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농지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보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필지들을 누락 제출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260,000원
내 용

2019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 카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2019년 총 2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생생카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260,000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중복지원 된 260,000원은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7]

김 제 시

기관·부서명 금산면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의사무능력자로 등록 관리 후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 외 6세대에 대해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금산면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①(116쪽)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카드 등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①(123쪽)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에 따라 읍면동장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금산면은 ○○○○외 2명의 신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의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고 사망자 강*순외 12명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미회수 하는 등 복지카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